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72
----------	-------

발의연월일 : 2022. 10. 20.

발 의 자 : 김정재 · 이종배 · 강대식  
박정하 · 유경준 · 김학용  
정동만 · 윤창현 · 서일준  
서범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젊은 인재와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도심융합특구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 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안 제8조 및 제9조)

시·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제안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음.

마.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바.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7조)

시·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특례 부여(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하여 타법상의 각종 구역·특구·지구·단지·지역·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지원, 국·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입주 지역중소기업 지원(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5.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3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7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성과와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등) ① 시·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6. 제1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

7. 재원조달방법
  8.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계획
  9.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0.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의 연계지정  
방안
  11. 기존 설치·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2. 제3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31조에 따른 기업종합  
지원센터 및 제32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  
방안
  1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건의료·교육·복지·문화·체육·주거시설 설치계획
  15. 교통처리계획
  16. 환경보전계획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세부목록
  18.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작성 및 특구개발의 시행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산업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제안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변경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정부부처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14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8호의 경우 해당 도심융합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의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산업·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건축전문가·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도심융합특구의 산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4.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1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

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등) ① 도심융합특구(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5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작성·승인)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4항 및 제16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를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

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약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8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사업시행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1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도심융합특구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

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

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에서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의 지정·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조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지정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특례지원 등)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도시의 혁신 실험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등에 관한 특례(이하 “규제샌드박스”라 한다)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 적용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산업융합 촉진법」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②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내 제1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를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와 도심융합특구 그 인근 지역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건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③ 도심융합특구 내 국유재산·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의 연

장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감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③ 국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교육도시·문화·복지·의료·정보통신·유통·주택사업 육성·지원 및 관리
3. 도심융합특구의 산업단지·교육도시·문화·복지·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의 조성·관리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정부는 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입주기업의 인력 양성
6.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입주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

중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3.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6.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도심융합특구
-----	-------------------------------------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에 (9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	---